

Online Series

2023. 12. 22. | CO 23-41

조선인권연구협회 백서와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대응논리

김 수 암(인권연구실 석좌연구위원)

‘책임규명’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백서 발간

지난 12월 11일 조선인권연구협회는 세계인권선언 채택을 계기로 “세계인권선언의 75년사는 무엇을 새겨주는가”라는 제목의 『백서』를 처음으로 발표하였다.¹⁾ 이번 백서는 ‘책임규명(accountability)’ 중심의 국제사회 대북인권 압박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발간된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 북한 내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규명’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설립되었고 COI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 2월 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였다. 동 보고서에서 COI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COI는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북한 내 인권침해 행위에 가장 책임이 큰 자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혹은 임시 재판소(ad hoc tribunal)에 회부하도록 권고하였다.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인권 개선전략이 북한 내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비처벌(impunity)’에 초점을 두고 최고준엄을 포함하는 ‘책임규명’ 방식으로 본질적으로 전환하면서 북한도 국제사회의 북한인권문제 제기에 대하여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를 상대로 1992년 8월 27일 설립된 ‘조선인권연구협회’가 북한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조선인권연구협회는 국제사회의 북한인권문

1) 『조선중앙통신』, 2023.12.11.



제 제기에 대해 『백서』, ‘고발장’, ‘공개질문장’, ‘성토장’ ‘대변인 담화’, ‘대변인 대답’ 등의 형태로 자신들의 입장을 변론하는 동시에 미국과 서방의 인권상황이 열악하며 유엔 인권기구가 서방에 의해 장악되어 정치화되었다는 주장을 펴왔다.²⁾

조선인권연구협회 활동의 일환으로 발간된 이번 백서는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이번 백서는 인권침해 이미지를 탈피하겠다는 의도로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 『인권을 말하다』³⁾ 등 기존 문헌에서 주장하였던 내용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자주적 권리’의 허상: 지도자에 의한 ‘시혜’로서의 권리

이번 백서에서 조선인권연구협회는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이 행사하여야 할 자주적 권리”로 인권을 정의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적 권리의 핵심 기반은 주체사상이다.⁴⁾ 주체사상에 기반할 경우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혁명적 수령관을 통해 인권을 바라보도록 북한주민들을 사상교양하게 된다. 수령을 중심으로 정치생명체를 이루는 주민들은 지도자(수령)의 올바른 지도에 의해서만 자주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인간이기 때문에 마땅히 누려야 할 천부적 인권은 부인되고 수령에 대해 충성을 다할 때만 향유할 수 있는 시혜로서의 권리로 전락하게 된다. 자주적 권리와 함께 북한은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는 사회주의헌법 제63조에서 보듯이 개인의 권리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모든 권리는 동등하게 중요하지만 북한은 특정 분야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인권관을 갖고 있다. 북한은 아동, 여성, 장애인 등 특정 분야의 인권에 대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부응하여 적극적으로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백서에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2) 북한은 국제사회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한반도 분단 상황에서 남한의 인권상황을 비난하는 2가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남한을 전문적으로 상대하는 조직은 ‘남조선인권대책협회’인데, 주로 자신들이 중시하는 인권기준에 따라 우리의 인권상황이 열악하다고 비난하는 내용으로 대응하고 있다. 남조선인권대책협회 명의로 발표한 『남조선인권유린조사통보』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남조선인권대책협회는 「백서」, 「대변인 담화」, 「대변인 대답」 등의 형태로 우리의 인권상황을 비난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023년 3월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북한인권보고서 2023』을 공식 발간하자 2023년 7월 이에 대응하여 『인권동토대: 남조선인권실상을 파헤쳐본다』(평양: 평양출판사, 2023)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3)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 2014.9.13.; 김혜련·김성호·김영일·김철준, 『인권을 말하다』(평양: 평양출판사, 2017).

4)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



‘자주권’: ‘인권은 곧 국권’ 명분으로 인권침해 회피

이번 백서에서 조선인권연구협회는 미국의 잦은 전쟁도발에 따른 사망과 난민 발생, 강압적인 제재조치로 인한 발전권 침해, 성희롱 및 성폭행 등 유럽연합의 인종차별적 인권침해 등 서방의 인권상황을 비난하고 있다.⁵⁾ 이러한 비난을 넘어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이 ‘인권재판관’ 행세를 하면서 도리어 다른 국가의 인권을 거론하면서 부당하게 내정에 간섭한다고 역공을 펴고 있다. 또한 미국 등 서방의 북한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인권우위론’, ‘인도주의 간섭론’으로 규정하면서 비난하고 있다. 특히 주권의 원칙,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국가의 자주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 인권은 한갓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북한은 ‘자주권’의 수호라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자주권의 논리는 ‘인권은 곧 국권’이라는 논리로 이어지면서 이번 백서를 포함한 북한의 모든 문건에서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다.⁶⁾ 인권은 국권, 즉 국가자주권의 논리 아래 북한은 대북적대시 정책이 북한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최대 위협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백서에서 이런 위협에 맞서 자주권과 발전권을 수호하기 위해 핵무력을 포함한 자위적 국방력의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궤변을 펴고 있다.

보편적 기준을 무시한 강한 상대주의

조선인권연구협회는 ‘국제인권장전’을 구성하는 핵심 문건인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조약에 대해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언급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증진 노력에 동참한다고 주장하면서 인권친화적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 위해 백서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를 상대로 인권친화적이라는 이미지를 선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기준을 빌어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지만 북한의 대응논리는 보편적인 국제기준과 거리가 먼 강한 상대주의 시각에 불과하다. 북한 내 인권 상황을 들여다보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있다.

©KINU 2023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5) 이번 백서에서는 “유럽동맹나라들의 인권실태도 미국과 별반 다를바 없다”라고 유럽 국가들의 인권상황도 비난하고 있다.

6)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